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7월 12일 수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江原日報	03면	자치도의회 기행위 심의	1
강원도민일보	03면	보조금 사업 칼 빼든 도에 "마구잡이식 폐지 경계" 주문	1
강원도민일보	03면	"도의회 지역상당소 설치 조례 즉각 철회를"	2
江原日報	03면	의사상자 예우 조례안 보류	2
강원도민일보	03면	도의회 고령친화도시 연구회 창립	3
江原日報	02면	강원자치도의원들 '고령친화도시 조성' 의기투합	3
江原日報	온라인	강원 학생 기초학력 진단.지원 강화된다	4
G1방송	온라인	학생 기초학력 진단·지원 강화 조례 상임위 통과	5
연말뉴스		[의회소식] 강원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6
江原日報	온라인	무더위쉼터 찾아가려니 위치가 북한?	7
세계타임즈		겉만 번지르한 무더위쉼터 안내 시스템	8
江原日報	15면	"제천~영월~삼척 고속도 조기 개통"	9
江原日報	04면	"강원형 마이스터고 육성... 학생 1천명 유치"	10
강원도민일보	04면	도교육청, 기말고사 오염수 문제 출제 확인... "교권침해 황..."	10
강원도민일보	01면	정부 신규 원전 추진 공식화... 또 삼척 거론 논란	11
江原日報	05면	재해위험지구 아닌데 '와르르' ... 산사태 막아라 비상	11
江原日報	01면	道 인구 이르면 3년 내 '150만 붕괴' 위기	12
江原日報	02면	道 인구 이르면 3년 내 '150만 붕괴' 위기	12
江原日報	05면	경찰 수사 칼날 최문순 전 지사 향하나	13
강원도민일보	08면	춘천시 외곽도로 구축 정부계획 반영 총력	14
강원도민일보	04면	올 봄 오락가락 날씨에 도내 과수농가 냉해 직격탄	15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기회발전특구 선의의 경쟁을	16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비은행기관 건전성 신뢰 유지 중요	17
江原日報	19면	[사설] 日 오염수 문제, 과학·논리·근거로 치밀한 대응을	18
江原日報	19면	[사설] 1조2,000억원대 공사,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돼...	19



자치도의회 기행위 심의 강원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한창수)는 11일 회의실에서 제32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갖고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준칙 운영 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사진은 심영곤(국민의힘·삼척)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모습. 박승선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07 12 ()
03

보조금 사업 칼 빼든 도에 “마구잡이식 폐지 경계” 주문

도 세수 부족 '긴축재정' 강조 속
도의회 “평가기준 구체화” 요구
복지예산 적재적소 투입 강조도

속보=세수 부족현실화에따라강원특별자치도가 '긴축재정' 방침을강조하며 재정 곳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마구잡이식' 사업 폐지를 경계할 것을당부했다.

최승순(강릉) 의원은 11일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칼을 빼든’ 강원도(본지 6월 16일자 1면 등)에 평가기준구체화를 당부했다.

최 의원은 “보조금을 방만하게 운영 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업에잘 활용되고 있는 데도 활성도가 떨어진다고 폐지하는 것도 목격된다”며 “평가를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하다보니, 현장에서 심도있는 평가를 할 수 없는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한수 도 기획조정실장은 “경제적으로 (평가) 등급을 할당 하다보니, 우

수한 것이 빠지거나 부족한 것이 포함되는 부분이 있다”며 “정부기준을강화하고 있으니, 정부지침에 따라 성과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이 는 도가 '긴축재정' 방침을 내세운 가운데 사업유지·중단의 기준을 정교하게 따질 것을 요구한 것이다.

김진태 도정은 취임 초부터 긴축 재정을 강조해왔다.

여기에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지방세가 1221억원 늘 견히고, 도내 지방교부세가 최대 12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긴축기조는 심화되고 있다.

이같은 기조는 이날 기획행정위에서 가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준칙 운영 조례'에도 나타난다.

조례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3% 이내, 예산대비 실질재무비율 5% 이내를 따르도록 했다. 2023년도 도 예산대비 실질재무비율은 6.91%다. 1%포인트를 줄이기 위해선 약 900억원의 채무를 줄여야 한다.

다만, 도는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도청 신청사 건립 등은 '예외' 사항으로 봤다.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김길수(영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에서 열린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업무보고에서 전찬성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의원의 발언에 김한수 실장은 “도 신청사가 향후 5년간 5000억원까지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특별재정 수요가 있는 와중에 재정준칙을 마련하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긴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일부 복지 예산은 확대될

요성이 제기됐다.

박관희(춘천) 의원은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도내 학대피해아동쉼터 5개소를 두고 “인력이 부족해서 자기희생을 통해 운영의 빈틈을 메우고 있다”며 “도에서도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이 필요하면 복지의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정재웅 사회문화위원장은 11일 본지 통화에서 “도 재정이 긴축 기조이지만, 물가 급상승 등으로 취약계층은 어려움이 있다. 복지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돼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설화 lhf@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 07 12 ()
03

“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조례 즉각 철회를”

정의당·강원 전공노 예산낭비 지적
“차기 선거위한 지역거점 마련 의심”

속보=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조례가 10일 상임위를 통과(본지 7월 10일 웹보도 등)한 가운데 도내 정당과 시민단체가 ‘예산낭비’를 지적하며 조례 철회를 주문했다.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위원장 윤민섭)은 11일 논평을 내고 “도민과 대면 소통할 수 있다는 것에 의의를 두기에 지역상담소는 과대한 예산 대비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지역상담소는 자칫 도의원 개인 사무소로, 사적 연락망으로 운영될 소지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의회 심영곤 운영위원장은 ‘보이지 않는 운영의 가치를 봐야 한다’라고 했지만, 지역상담소는 이렇다 할 가치를 담고 있지 않기에 앞으

로도 그 가치를 찾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본부장 양선재)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도의회의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조례’ 통과에 대해 “명분도 실리도 없다”며 해당 조례안 철회를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상담소 운영으로 향후 5년간 46억2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는데 언제든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지금까지 도원들이 지역민원 수렴창구가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었나. 각 시·군·통·반장을 통해서나 도의회 홈페이지, 개인 SNS를 통해 언제든지 민원을 수렴할 수 있는 상황인데 굳이 상담소가 있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원수렴 공간이 없다는 핑계로 차기 선거를 위한 지역거점 마련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을 수 없다”고 했다.

이설화·신재훈

江原日報

2023 07 12 ()
03의사상자 예우 조례안 보류
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타인을 구하려다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의사상자와 가족을 예우하기 위한 조례가 보류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11일 제32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통해 이 지영(더민주·비례)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했다. 의원들은 제대로 된 예우를 위해 조례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심오섭(국힘·강릉) 의원은 “국가 유공자들과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추가 검토를 요청했고, 유순옥(국힘·비례) 의원은 “타 시·도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도내에서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경우,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복 지급 등의 문제를 지적한 박관희(국힘·춘천) 의원은 “서둘러 조례를 제정하면 제대로 예우하는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현정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07 11 ()
03

도의회 고령친화도시 연구회 창립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오는 12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고령친화도시 연구회’ 창립총회를 갖고 고령친화도시에 필요한 정책 연구를 시작한다.

회장 박윤미(원주·더불어민주당) 의원, 간사 이지영(비례·) 의원을 비롯해 최승순, 유순옥, 최종수, 진종호, 이한영, 박찬홍, 지광천, 최규만, 이영옥, 이승진 의원 등 12명이 활동한다.

이설화 lofi@kado.net

江原日報

2023 07 12 ()
02

강원자치도의원들 ‘고령친화도시 조성’ 의기투합

오늘 도의회서 연구회 창립총회
회장 박윤미·간사 이지영 의원

강원자치도의원들이 ‘고령인구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연구회’가 12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시작한다. 연구회 회장은 박윤미(원주) 도의원, 간사는 이지영(비례) 도의원이 맡았다. 회원으로는 최승순(강릉)·유순옥(비례)·최종수(평창)·진종호(양양)·이한영(태백)·박찬홍(춘천)·지광천(평창)·최규만(횡성)·이영옥(홍천)·이승진(비례) 도의원이 활동한다.

연구회는 고령화 시대 실태를 파악하고 사회적 정책과 관심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과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구성됐다.

박윤미 도의원은 “고령화 시대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 사회



◇박윤미 의원



◇이지영 의원

현실이며, 고령층에 대한 비용 부담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문제점을 논의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강원자치도를 고령친화도시 모범 사례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정기자

2023 07 11 ()

江原日報

강원 학생 기초학력 진단.지원 강화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11일 1차 회의 통해 원안 가결



엄기호(국힘.철원) 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1일 제32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엄기호 도의원(국힘.철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육환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례는 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평가 지표 등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또 기초학력진단 검사의 장려를 위해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학교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도록 한다. 다만,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특별법' 등 법령에 따라 제한적인 범위에서 학교운영위 등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엄기호 의원은 "기초학력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개인이 사회적 존재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수단이자 사회 참여에 필요한 필수적 전제 조건으로 인권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간 교육 편차 극복을 통한 공정한 교육 기회 보장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11일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2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의 심의.의결 거쳐 공포하게 된다.

2023 07 11 ()

G1방송

학생 기초학력 진단·지원 강화 조례 상임위 통과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엄기호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이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습니다.

이 조례안은 교육감이 도내 학생들의 기초 학력 보장과 향상을 위해 기본 방향과 각종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기초학력 진단 검사 시행 학교에는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의회소식] 강원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춘천=연합뉴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엄기호(철원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평가 지표와 결과, 진단검사 지원, 학습지원 대상 학생 선정과 학습지원 교육 사항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기초학력 진단 검사 장려를 위해 검사를 시행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진단검사 결과는 교육기관정보공개법 등 법령에 따라 제한적인 범위에서 학교 운영위 등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연구회 창립

(춘천=연합뉴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연구회'가 오는 12일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시작한다.

연구회는 가파른 고령화 시대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과 관심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한다.

각기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 12명으로 구성했으며, 연구회를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박윤미(원주2) 의원이 회장을 맡는다.

박 의원은 "고령화 시대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며, 고령층 증가로 인한 비용 부담은 여러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고령친화도시 선진 본보기가 되도록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2023 07 11 ()

江原日報

무더위쉼터 찾아가려니 위치가 북한?

이지영 의원 '결만 번지르한 무더위쉼터 안내 시스템' 지적



고성군 산학리 정자 무더위쉼터 위치정보 사진

폭염 기간 더위에 취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 운영되고 있는 무더위쉼터 운영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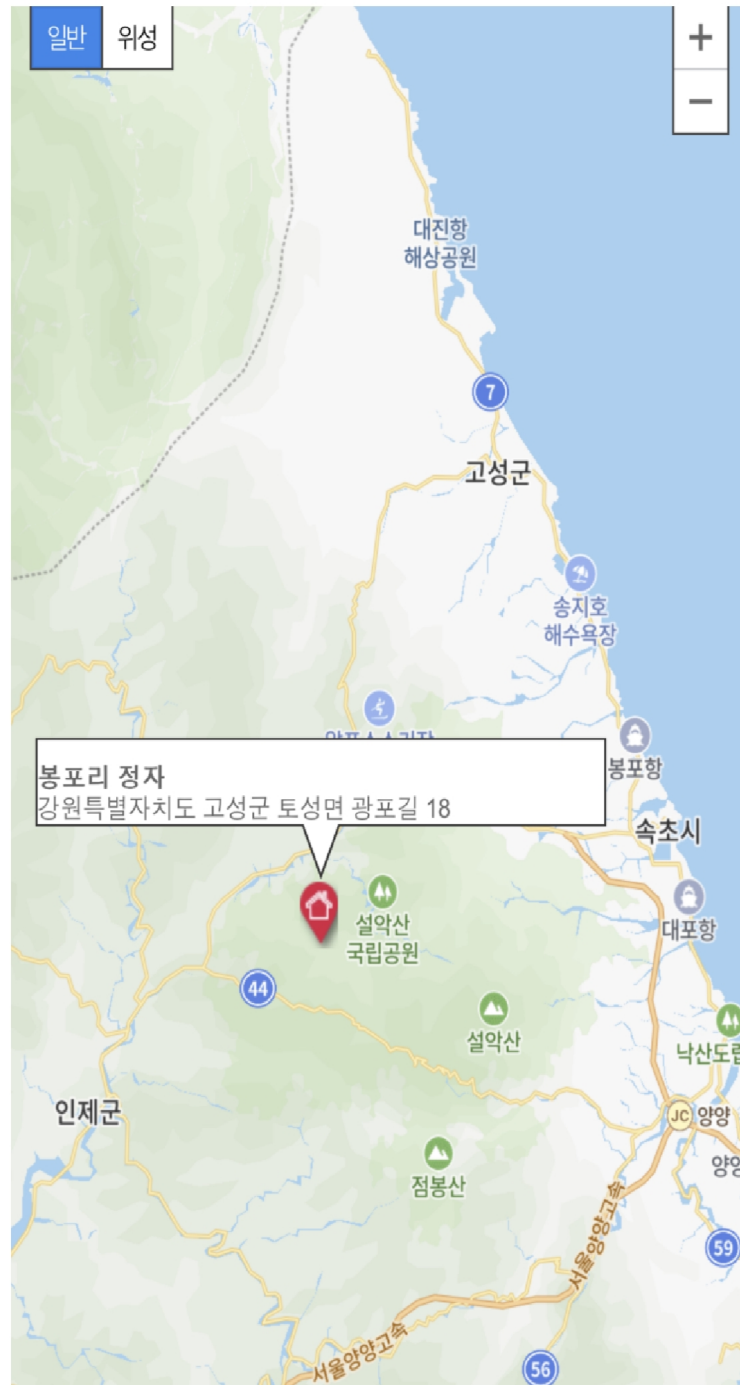
이지영(더민주.비례)의원은 11일 강원자치도가 무더위쉼터를 이용할 때 위치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한 '재난안전정보포털앱 안전디딤돌' 내 위치정보가 엉터리라고 밝혔다. 일부 무더위쉼터는 타 지역의 위치로 확인되고, 심지어 한 곳은 북한으로 확인되는 등 안전디딤돌 앱 내의 무더위쉼터 위치정보가 일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지정된 야외 무더위쉼터 중 일부는 고온에 그대로 노출돼 폭염 대피 시설로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영 의원은 “도내 고령인구 등 폭염취약계층이 다수 분포된 상황에서 무더위쉼터 안내 정보를 전수조사하고 재정비해 효율적인 운영을 제고해야 한다”며 “폭염 피해 예방 조례를 통해 체계적인 폭염 피해 예방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은 이날 강원자치도의의회 안전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2023 07 11 ()

세계타임즈

걸만 번지르한 무더위쉼터 안내 시스템



최근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령되고 있는 가운데, 허술한 무더위쉼터 운영으로 도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무더위쉼터는 여름철 폭염 기간 중 더위에 취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운영되고 있는 시설로, 강원자치도는 무더위쉼터를 이용하려는 경우 재난안전정보포털 앱 안전디딤돌을 통해 위치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무더위쉼터는 타 지역의 위치로 확인되고, 심지어 한 곳은 북한으로 확인되는 등 안전디딤돌 앱 내의 무더위쉼터 위치정보가 일부 엉터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정된 야외 무더위쉼터 중 일부는 고온에 그대로 노출되어 폭염 대피 시설로 적합하지 못한 곳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지영 의원(비례)은 “도내 고령인구 등 폭염취약계층이 다수 분포된 상황에서 무더위쉼터 안내 정보를 전수조사 및 재정비하여 무더위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제고해야 한다”며, “향후 폭염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해 체계적인 폭염 피해 예방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江原日報

2023 07 12 ()
15

“제천~영월~삼척 고속도 조기 개통”

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

최명서 영월군수 청사진 제시
부지사 “환경·개발 조화”

【영월】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발맞춰 2034년 제천~영월~삼척 고속도로 개통 등 미래 영월의 청사진이 제시됐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영월군은 11일 영월문화예술회관에서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명서 군수는 특별자치도를 통해 균형 있는 개발과 보존 등 4대 핵심 규제 해소를 적극 활용해 영월의 비전 실현 속도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



◇강원특별자치도와 영월군이 마련한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설명회’가 11일 영월문화예술회관에서 최명서 영월군수와 심재섭 군의장, 김길수·윤길로 도의원, 김대경·박해경 군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장했다.

최 군수는 “영월군은 산림이 84.7%이며 전체 농지 중 36%는 농업진흥지역(구 절대농지)으로 묶여 있어 사실상 제대로 된 공장 터 하나도 조성하기도 힘들다”며 “과거 일자리를 찾

아 영월을 떠났다면 출향민과 수도권 시민들이 영월에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군 핵심자원 활용 특화 사업 발굴 및 고도화한 특례를 3차 개정안에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34년 충북 제천에

서 영월, 삼척을 잇는 동서고속도로 조기 개통은 강원특별자치도가 다른 지역과 같은 상황에서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것”이라며 “1935년 도내 최초 탄광 개광 이후 100년 만의 영월 대변혁 시기가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선 도 행정부지사는 “그 동안 산업적 기반이 약하고 각종 법에 규제를 받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우리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시대가 왔다”며 “자유의 땅 강원특별자치도가 환경 보전과 개발을 조화롭게 추진하는 탄소중립 녹색 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오윤석기자

2023 07 12 ()

04

江原日報

“강원형 마이스터고 육성... 학생 1천명 유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강원형 마이스터고’를 육성, 타 시·도 학생 1,000명 유치에 나선다. 급변하는 산업구조에 맞춰 취업 및 대학진학 경쟁력도 강화한다.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11일 도교육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직업계고=인구정책’, ‘공부 잘하는 강원 직업계고’를 새로운 비전으로 정했다”며 ‘강원특별자치도형 마이스터고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추진 계획에는 내년에 개교하는 한국항공고(태백기계공고 전환)를 비롯해 국방 분야의 가정 국방과학고(김화공고 전환), 산림 분야의 가

신 교육감 ‘직업계고=인구정책’ ‘공부 잘하는 직업계고’ 비전 제시
항공·국방·산림·세무 4개 학교 선정... “글로벌 기술인재 키울 것”

침 산림과학고(신남고 전환), 세무·금융 분야의 가정 세무금융고(황지정산고 전환) 등 4개 학교를 ‘강원형 마이스터고’로 육성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한국항공고는 내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며, 나머지 3개 학교는 학과 개편 및 신설을 추진, 2026년계부터 신입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교육청은 영월에 있는 한국소방 마이스터고와 춘천에 있는 강원애니

고의 우수 사례를 적용해 타 지역에서 찾아오는 학교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소방마이스터고의 경우 전교생의 56%가 타 시·도에서 전입해 온 학생이며, 강원애니고 역시 53%가 외지 출신이다.

이와 함께 학생 선호도가 높은 취업, 대학진학 등에도 집중해 이른바 ‘공부 잘하는 강원 직업계고’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향후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을 활용한 자율권 및 독

립성 강화, 학교장 공모제 운영 및 권한 강화, 학급당 학생 16명의 소수정예 기술인재 육성, 원거리 학생 지원을 위한 직업계고 온라인 포털 구축 등 19가지 지원정책을 실시한다.

신경호 교육감은 “강원특별자치도형 마이스터고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극복하고 인구소멸지수가 높은 지역의 새로운 해법이 될 것”이라며 “4차산업으로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학생·학부모의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전국 최우수 특화형 고등학교 신설을 통해 미래형 글로벌 기술인재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원선영기자 haru@

강원도민일보

2023 07 12 ()

04

도교육청, 기말고사 오염수 문제 출제 확인... “교권침해 황당”

하태경 의원 “반대유도 제보 확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하태경 국회의원실의 요구에 따라 강원도내 고등학교 기말고사 시험문제에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내용이 출제됐는지 확인에 나서자 일선 학교와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본지 취재결과 이날 교육청은 도내 고등학교에 기말고사 시험문항 중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문을 시행했다. 이는 최근 하태경 국회의원실이 각 시·도교육청에 시행한 공문에 의한 후속 조치다. 하태경 의원실은 △일선 고등학교 기말고사 시험문항 중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문제 포함 여부(문제 출제 학교 리스트 포함) △문제가 포함됐을 경우 시험문항 원문 제출 등을 요구했다. 도교육청이 국회의원의 요구에 의해 일선 학교에 ‘후쿠시마 오염수’ 출제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자 교육현장과 교

원단체는 반발하고 나섰다. 도내 A고 교 교장은 “국회의원이 자료를 요구해 솔직히 황당하다”라고 전했고, B고 교장도 “찬·반 의견이 분분한 사안에 대해 정치인이 집계를 요구하는 것은 교권 침해”라고 말했다.

이번 공문시행에 대해 전교조 강원지부는 “교육과정 중에는 현실 사회의 주요 문제를 다뤄 수업하고, 토론하도록 돼 있으며, 교사는 이를 평가하기 위해 시험문제로 낼 수도 있다”면서 “의정활동의 이름으로 국회의원 학교에 자료 요구를 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월권”이라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하태경 의원은 11일 본지 기자에게 “학생들에게 방류수 반대를 답 하도록 유도하는 문제가 출제됐다”는 제보가 있어 전국적으로 교육현장 실태 확인을 하고자 공문을 시행하게 됐다”면서 “검열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이미 출제 후 공개된 시험 문제에 대해 단 순히 확인하는 것”이라 밝혔다. 정민영

2023 07 12 ()

01

강원도민일보

정부 신규 원전 추진 공식화...또 삼척 거론 논란

용인반도체 등 전력수요 급증에
수도권 위해 강원도 희생 우려
2012년 삼척 대진 전면 백지화
삼척시 "40년 갈등 재점화 안돼"

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 전력수요 급증을 이유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공식화한 가운데 삼척시 일대가 신규 원전 부지로 또다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삼척시는 "40년 동안 갈등을 빚었던 원전 문제가 또다시 거론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원 반도체 산업이 융수는 물론 전력 문제까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강원도는 정부 방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 개최한 제29차 에너지위원회에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년) 수립을 기존 계획보다 6개월 앞당겨 이달 말 착수하고, 신규 원전을 포함한 새로운 에너지 구성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원전, 수소 등 새로운 공급 여력 확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정부 주도 국가첨단 산업 육성에 따라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신규 원전 건설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7일 개최된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대책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한국전력공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용인시 등은 용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 10GWh·일일 65만t의 산업용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을 공식화한 가운데 삼척시 일대가 원전 후보지로 오르고 있어 지역사회 내 논란이 예상된다. 삼척시 근덕면은 지난 2012년 '대진원자력발전소 건설 예정구역'으로 확정된 이후 탈원전 기조의 문재인 정부에서 전면 백지화됐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강원 희생론'은 또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수도권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강원도가 신규 원전을 끌어안고 '전력 공급처'로 전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22년 기준, 강원 지역 전력 자급률은 195%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상위 5위 수준이다. 도내에서 생산된 전력(3만 3876GWh) 가운데 절반 가량은 타 지역으로 보내지고 있다.

범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필요한 전력은 10GWh로 예상됐다. 이는 도내 전체 사업발전소의 발전설비 9.9GWh를 웃도는 규모다.

강원도는 정부의 수급계획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원전 건설은 국가 전력 수급 기본계획에 담겨야 추진이 가능하고, 원전 후보지 선정은 계획 수립 이후 진행된다"며 "삼척시 일부 단체가 원전 유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삼척시 정책 방향과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도내 지자체의 원전 유치 움직임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했다.

박상수 삼척시장은 "삼척지역은 지난 1980년대부터 원전 지정과 해제가 반복되면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개발 제한에 따른 주민 재산권 침해, 투자위축 등 어려움을 겪었다"며 "지역 주민들 대부분이 원전 사업에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주민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원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덕형 duckbro@kado.net

2023 07 12 ()

05

江原日報

재해위험지구 아닌데 '와르르'... 산사태 막아라 비상

도내 급경사지 3천여곳

집중호우 속에 정선읍 봉양리 세대 피암터널 구간에서 산사태까지 발생하면서 강원지역 급경사지(경사도 34도 이상)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세대 피암터널 같은 급경사지가 강원지역에만 3,000여곳에 달한다.

11일 강원자치도와 정선군에 따르면 지난 6·7·9일 3회에 걸쳐 304톤 규모의 돌과 흙이 쏟아진 정선읍 봉양리 485번지 일대는 2007년, 2019년 피암터널 공사를 마치고 급경사지 재해위험지구에서 해제된 상태였다. 피암터널은 재해위험도 등급도 C등급으로 붕괴위험지역(D·E등급)도 아니었지만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가 발생했다.

급경사지 재해예방법 등에 따르면 각 시·군은 재해위험도 평가를 거쳐 D·E등급은 반드시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고시해야 하고, 나머지 등급

정선 봉양리 피암터널서
3일간 수백톤 토사 쏟아져
해당 지역 재해위험 C등급

D·E등급 도내 361곳 달해
개발 영향 급경사지도 증가
과거 사고지역 중점관리해야

(A~C등급)은 지역 여건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번에 산사태 사고가 발생한 피암터널 구간의 급경사지 경사도는 80도로 매우 가파르다. 100m 길이의 터널을 추가로 설치하는 데에 1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다.

문제는 강원자치도에는 피암터널 같은 급경사지가 수천곳에 달한다는 점이다. 강원자치도 내 급경사지는 3,103곳이며, 이 중 정선 피암터널과 같은 C등급은 1,887곳이다. 붕괴위

험이 큰 D·E등급은 361곳에 달한다.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39곳이다. 택지, 도로, 철도 등 개발사업이 많아지면서 급경사지도 매년 늘고 있다. 여기에 지형 특성도 취약 요인이다.

정선군 관계자는 "높은 산이 많은 만큼, 피암터널 구간과 같은 급경사지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선군이 관리하는 급경사지만 335개에 달한다.

급경사지 낙석, 붕괴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지자체의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도 커졌다. 정선군의 경우 6·7 일 이틀간 1, 2차 산사태(3톤·1톤 규모)가 발생하자 도로 통행을 제한했다. 9일 300톤 규모의 산사태가 났을 때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백민호 강원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강원도는 급경사지 산사태 위험에 취약한 상황"이라며 "각 시·군은 위험지구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특히 과거 사고 발생지역을 중점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江原日報

2023 07 12 ()
01

道 인구 이르면 3년 내 '150만 붕괴' 위기

6월 기준 '153만2,617명' 12년 만에 최저...1년새 6천명 줄어
저출산·고령화 영향 '자연감소' 지난해 역대 최고 7,800명

강원특별자치도 내 인구가 1년 새 6,000명 이상 감소하면서 2011년 수준으로 떨어졌다. 2년 연속 인구 감소가 이어지면서 불과 3~4년 뒤면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만명 붕괴마저 우려되고 있다.

1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분

석한 결과, 지난해 도내 주민등록인구 수는 153만2,617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1년 만에 6,447명 줄어든 것으로, 2011년 6월(153만2,178명) 이후 12년 만에 최저치다. 감소 폭도 2018년 12월 이후 가장 컸다. 도내 인구는 지난해

8월부터 11개월째 전월 대비 감소하고 있는데, 인구 월별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오랜 기간 역성장 중이다. 이는 강원지역에서 자연적으로 줄어든 인구(출생아-사망자) 규모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2016년 1,300명 수준이던 도내 자연감소 인구는 매년 1,000명가량씩 늘면서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 수준인 7,800명 감소를 기록했다.

그동안 도내 인구수 유지에 한몫

을 해 온 전입인구 수도 최근 부동산 거래 침체로 크게 감소한 상태다.

저출산은 이미 심각하다. 지난해 도내 출생아 수는 7,300명으로 10년 전인 2012년 1만2,400명 대비 41% 급감했다. 강원자치도는 2014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질렀고 해마다 격차가 커지고 있다.

강동휘기자 yulnyo@kwnews.co.kr

2면에 계속

江原日報

2023 07 12 ()
02

道 인구 '150만 붕괴' 위기

-1면에서 계속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3~4년 이내에 '도내 거주인구 150만명선'이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내 인구는 1990년대 이후 30여년째 150만~155만명을 유지하면서 '300만 강원도민'(도내 150만+출향인 150만)이라는 용어가 자리를 잡았다. 도내 거주인구가 150만명 아래로 내려가면 심리적 경계선이 무너지면서 지역소멸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대로 된 인구 감소 대응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이원학 강원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지역소멸을 최대한 억제하려면 청년층 인구 비율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들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서핑문화를 활성화해 젊은 층을 끌어모은 양양의 사례처럼 문화, 환경, 주거 개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江原日報

2023 07 12 ()
05

경찰 수사 칼날 최문순 전 지사 향하나

‘망상지구’ 특혜 의혹

경찰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망상지구 개발사업 비리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유력 정치인 배후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 넓혀질지 주목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가 11일 벌인 압수수색 대상에는 신동학 전 동자청장과 이우형 전 동자청 사업부장의 사무실, 주거지 등도 포함됐다. 이들은 인천 전 세시기 주범인 ‘건축왕’ 남모(61)씨가 망상지구 개발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문순 전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입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신 전 청장과 이 전 부장은 강원자치도 감사위원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대상이기도 하다.

강원자치도 감사위원회는 남씨가 망상1지구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관여한 최문순 전 지사와 신동학

도감사위 지난달 3명 수사 의뢰
최 전 지사 제외한 2명 압수수색
경찰 “압수물 분석 후 입건 결정”

전 청장, 이우형 전 부장 등에 대한 수사를 지난달 경찰에 의뢰했다.

강원자치도가 수사를 의뢰한 대상 3명 중 2명이 경찰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면서, 강원도 감사 결과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망상1지구 개발사업은 6,674억원을 들여 대규모 국제복합관광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었지만, 남씨가 사업부지를 모두 매입하지 못하고 토지 수용재결 공탁금 200억여원도 예치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강원자치도 감사위에 따르면 동자청, 강원자치도는 남씨 외에 사업제안서를 낸 경쟁업체가 있었음에도 2017년 7월 남씨와 사업자 지정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경쟁업체인 A사의 제안서 심사는 열흘 뒤에 이뤄졌고 또 다른 경쟁업체인 B사의 심사는 9월8일이었다. 감사위는 공모가 필수는 아니지만 심사 전반에서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망상지구 개발사업자 선정 과정의 부실 검증이나 유착 여부 등 특혜 의혹 전반을 수사 중”이라며 “압수수색 증거물 분석을 거쳐 최 전 지사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3 07 12 ()
08

춘천시 외곽도로 구축 정부계획 반영 총력

국도·국지도 5개년 5건 제출
용산~안보 우회대체도로 등
내달까지 서류평가 관심 집중

속보=춘천시가 외곽도로 구축 5개 사업을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2026~2030) 계획으로 제출(본지 4월 26일자 9면)한 가운데 오는 8월 1차적으로 제외 사업이 추려지면서 사업 최종 반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본지 취재 결과 강원특별자치도는 앞서 지난 5월 17개 시·군이 제출한 사업 40여 건을 취합해 정부에 제출했다.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전국에서 취합된 서류 600여 건에 대해 평가 중이다. 시와 도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은 내달까지 서류평가를 마쳐 제출 서류 중 약 30% 정도가 1차적으로 걸러질 전망이다.

정부는 내달 말까지 서류평가를 마친 뒤 이를 토대로 오는 9월부터 현지 조사에 돌입한다. 계획이다. 전국 우선순위까지 매기려면 내년 2월까지의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어 같은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해 오는 2025년 12월 계획이 최종 확정·고시된다.

춘천시는 앞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실시한 수요조사에 자체적으로 순위를 매겨 5건을 제출, 계획 반영을 요

청했다. 1순위는 용산리~안보리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사업이고 2순위는 춘천~홍천 국도 5호선 도로 확장이다. 3순위 서면 금산~신매 국지도 70호선 4차선 확장, 4순위 동내면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5순위 남춘천 IC 인근 국지도 86호선 4차선 확장 순이다.

이와 맞물려 강원특별자치도는 최근 6차 국도·국지도 계획 대응 차원에서 총괄기본계획 용역에 돌입, 계획안에 강원도 사업이 최대한 많이 담길 수 있도록 분석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용역 결과는 내년쯤 나올 전망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특정 노선에 대한 용역은 아니며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춘천시는 지역 순환 교통망 구축을 위해선 5개 사업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안보~용산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제2경춘국도 개통 이후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와 시 모두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앞서 이 사업은 5차 계획에 반영을 추진했지만 타당성 조사 결과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반영에 실패한 전례가 있다. 고은리 일대에 들어서는 강원도 신청사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도 정족리와 만천리를 잇는 국도대체우회도로도 시급한 사안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좀 더 많은 사업이 6차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이승은 ssnee@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 07 12 ()

04

올 봄 오락가락 날씨에 도내 과수농가 냉해 직격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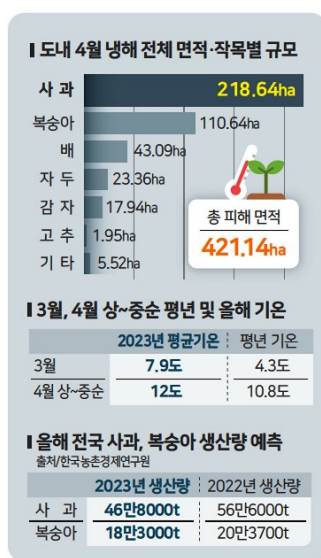
4월 이상기후 피해 농민 근심
상품성 하락·생산량 감소 예측
도 “농식품부 전달 복구 지원”

넠뛰던 4월 날씨에 강원농가가 결국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4월 이상기후로 인해 농작물들이 냉해를 입어 작과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는데 이제 그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 강원도내 농민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11일 본지 취재 결과 강원도의 경우 춘천, 원주,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화천, 양구, 인제 등 10개 시·군에서 약 412.14ha의 냉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사과가 가장 많았고, 복숭아, 배, 자두, 감자, 고추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냉해가 발생한 이유는 4월 발생한 이상기후 때문이다. 올해 3월과 4월 상순~중순의 경우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으며 따뜻한 남풍이 불어 평년보다 평균기온이 높게 나타났다. 올해 3월 평균기온은 7.9도로 평년보다 3.6도 높았고 최고기온은 15도로 평년에 비해 4.8도 높았다.

개화도 빨라졌다. 올해 북강릉의 경우 3월 26일에 벚꽃이 피면서 가장 빨



랐던 2002년 3월 21일 다음으로 빨리 개화했다. 3월에 이어 4월 상·중순에도 평균기온 12도로 평년에 비해 1.2도 높았으나 상중 찬 기압골이 통과했던 지난 4월 27일 태백 -1.7도, 정선 0도, 춘천 1.7도, 홍천 2.6도, 원주 3.8도 등 강원영서와 산지를 중심으로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는 등 갑작스러운 저온 현상이 나타났다.

문제는 지난 4월 발생한 냉해가 수확철을 맞은 과수작물에 생산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전국적으로 사과와 복숭아 등 과수작물의 경우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사과 생산량은 전년(56만6000t) 대비 약 17.3% 감소한 46만8000t 내외로 전망됐다. 평년보다도 약 8.1% 줄어든 것으로 예상했다. 복숭아 또한 올해 생산량이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재배면적과 단수가 각각 줄어 전년(20만3700t) 대비 10%, 평년 대비 8% 감소한 18만3000t 내외로 관측됐다. 신성호 한국농업경영인 춘천시연합회장은 “현재 수확을 진행하기 위해 농원을 살펴보니가 달려있는 과실 중 약 30%가 상품성이 없는 기형과이거나 속이 비어있는 ‘뽕과’인 상황”이라며 “수확을 해보면 상품성이 떨어지는 복숭아가 더 많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도 농정당국은 “우선 도내 피해규모와 복구비용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계획서로 작성해 전달했고 농식품부에서 복구 계획이 확정돼 내려오는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호

강원도민일보

2023 07 12 ()
/ 19

기회발전특구 선의의 경쟁을

-세제 감면 등 파격 혜택, 기업 유치 견인 기대

지역 균형발전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지자체의 활동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기초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투자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정책입니다. 정부는 특구를 통해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구상입니다. 특구는 시도에 1개씩 지정할 예정이며, 내년 초에 공모합니다. 선정된 지자체는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발전의 동력을 얻게 됩니다. 아직 지정에 따른 세부 기준이 나오지 않았지만, 도내 지자체는 첨단 분야 등 산업 육성 계획을 마련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기를 바랍니다.

특구 투자기업에 대한 혜택은 파격적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엔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에 국세·지방세는 물론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을 확대해, 특구 내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개발 부담금을 100% 감면할 계획입니다. 또한 실증특례 등 규제 특례 3종 세트를 도입하고, 초중고 설립 지원 등 정주여건 개선까지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지자체는 세제지

원은 물론, 거주하는 구성원의 생활 조건까지 마련해주는 기업 맞춤형 정책을 펼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자체는 특구 지정에 경쟁적으로 뛰어 들고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하면 고용 창출과 인구 유입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내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도가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1차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영월 평창 정선 양양 등 9개 시·군이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각 시·군은 전담 조직을 꾸리고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등 특구 지정을 위해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내년 초 공모 일정을 감안한다면, 희망 지역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대규모 특구 작업입니다. 더불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가시적인 기업 유치 효과를 볼 수 있는 균형발전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허약한 산업 기반을 개선하고, 공동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시군마다 반도체와 의료기기, 디지털 산업, 바이오산업 등 미래 경제 가치를 실현할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해 성과를 내야 할 것입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 07 12 ()
/ 19

비은행기관 건전성 신뢰 유지 중요

-한은강원본부·지자체·연구기관 공조기구 필요하다

금융불안 우려가 커지자 한국은행 강원본부에서 금융기관 경영 현황을 살피고 위험요인을 점검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상호금융, 신협,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금융기관을 살핀 결과 비수도권 7개도에 비해 금융건전성은 양호하지만, 대출자산 부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신뢰 유지를 위한 남다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향후 경기가 더 침체되고 대출금리 상승 등의 악재가 이어질 경우 부실대출이 급격히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강원지역 비은행 금융기관 리스크 점검(권기백·정준호·김주현 작성)에 따르면 22년 말 기준 유동성 비율은 전년 대비 10% 상승하고 수익성은 개선됐지만, 자본적정성과 자산건전성은 다소 악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높은 대출금리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전 업권에서 대출자산 부실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부실 가능성 점검 필요를 제기한 것입니다.

최근 도내 고령층과 저소득층에서 가계대출 연체율이 올랐으며,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대출금 상환에 취약한 개인사업자입니다. 취약대출자 중에서도 개인사업자의 소득 대비 대출비율(LTI)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전국 및 7개도 평균을 보

면 2021년 최고로 올랐다가 2022년엔 내렸습니다. 반면 강원지역은 21년까지 내리막이었는데 오히려 2022년 들어 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최근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능력이 더 부족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강원지역은 예금은행보다 비은행 금융기관이 활성화 된 지역입니다. 2022년 말 기준 강원지역 비은행 금융기관 점포수 비중은 83%에 달합니다. 전국 77%에 비하면 높은 편입니다. 여신액 규모는 전국 평균보다 무려 20%p 높습니다. 전국은 28%인데 비해 강원은 48%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은행보다는 비은행기관에서 대출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금융부문에서 비중이 높은 비은행기관 측의 경영 신뢰성 및 건전성 유지를 위해 남다른 노력이 요구되는 배경입니다.

또한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제시한 대로 금융불안 요인을 조기 발견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감독당국, 정책연구기관 간 공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금보호한도액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이 늘고,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대규모 예금인출 발생 가능성은 이전보다 커졌고, 소규모 조합일수록 불안 영향을 심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江原日報

2023 07 12 ()

/ 19

日 오염수 문제, 과학·논리·근거로 치밀한 대응을

여야가 10일부터 7월 임시국회 회기를 시작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 각종 현안이 기다리고 있어 7월 국회에서도 여야 갈등은 격화될 전망이다. 임시국회가 10일 문을 열었지만 회기 종료 날짜는 정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고 31일에 마치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7월이 원래 휴회기인 점과 '이재명 방탄국회'를 막겠다며 21일 종료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공방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 공개 이후 여야는 극한 대치를

이어 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IAEA 보고서를 근거로 민주당에 '괴담·선동'을 멈추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7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외치며 1박2일 철야농성과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여기에서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10명이 10일 일본으로 2박3일 '원정 시위'를 떠났다. 도쿄에 도착한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연대와 행동 책임감으로 모두의 바다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앞서 "일본의 정치인, 전문가, 시민사회와 만나 연대 투쟁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겠다는 발상 자체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절차와 방식에 문제가 있다. 기시다 후미

오 일본 총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로 출국해 관저에 없는 이날 총리 공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보여 주기식 집회다. 정치인의 외교적 행보는 일정을 조율하는 게 상대국에 대한 예의이자 관례다. 앞서 올 4월 초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일본 도쿄와 후쿠시마를 찾다가 도쿄 전력 및 정부 관계자도 만나지 못한 채 사진만 찍고 돌아왔다. 이번 의원들의 일본 방문도 그 연장선이다. 일본 오염수 문제는 오로지 과학과 논

리, 근거로 치밀하게 대응해야 우리 국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IAEA가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안전하다'는 최종 보고서를

임시국회 10일부터 개회, 후쿠시마 방류 쟁점

IAEA, 안전 발표에 심리적 불안은 여전

향후 검증 과정에서 정당한 요구 할 수 있어야

발표했지만 소비자들의 심리적 불안감, 이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동해안 바닷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여야는 동해안에서 생업을 하는 주민들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한다. 고성, 강릉 주문진읍 일대에는 어민 수만 2,095명이다. 정부가 수산업계 지원을 위해 정부 비축예산을 지난해보다 두 배 늘리는 등 올해 3,5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문제는 어민 지원은 하되 촘촘한 과학적 근거로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국제사회 및 한국과 아무런 협의 없이 8월 방류를 결정한 일본에 향후 우리 정부가 검증 과정에서 정당한 요구를 하기 위해서도 그렇다.

江原日報

2023 07 12 ()

/ 19

1조2,000억원대 공사,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돼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제5차 국도·국지도(국가지방도로) 계획에 포함된 도내 물량 중 1조2,038억원 규모의 11개 도로 사업을 2024년 하반기 발주 목표로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국도 5호선 제천 봉양~원주 신림 구간 4차로 확장을 비롯해 국도 6호선 평창 진부~강릉 연곡 구간, 국도 56호선 철원 근남~화천 상서 구간, 춘천 사북 오탄 구간, 국도 31호선 인제 상남~기린 구간, 평창 노동~홍천 자운 구간의 선형개량사업 등이 주요 사업이다. 국가지방지원도로 건설사업 중 국지도 82호선 영월 주천~판문 구간(8.42km·709억원)과 국지도 88호선 영월 주천~한반도 구간(6.1km·480억원)도 내년 착공을 목표로 설계가 한창이다. SOC사업 축소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건설경기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전후방 효과는 엄청나다. 2020년 기준 도내 건설업 생산액은 4조4,000억원으로 GRDP(48조7,000억원)의 9.0%(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2 지역건설산업 통계)를 차지했다. 건설업은 취업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21년 말 기준 도내 건설업 취업자는 전 산업 취업자(84만1,000명)의 9.9%에 해당하는 8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올 들어 도내 건설업계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결과 1~4월 수주액은 8,229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4,422억원) 대비 42.9% 줄었다. 건설경기 침체는 강원경제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

1조2,038억원 규모의 도로공사 발주는 침체 늪에 빠져 있는 지역 건설업에 커다란 호재다. 지역경제에 활기가 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러나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대기업과 역외 업체의 배만 볼릴 수도 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 각 지자체도 행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역 자본과 지역 건설업체들이 최대한 내년 도로건설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지역 업체들이 하청으로 들어가 부스러기만 주워 먹는 형국이 돼서는 안 된다. 건설 사업뿐 아니라 건설 자재나 인력의 공급 등도 지역에 최대한 이익이 되게 지자체와 건설사가 협력해야 한다. 지역 건설사들도 지자체의 교통 정리나 시대에 맞지 않는 특혜를 바라서는 안 된다. 경쟁에서 밀리지 않게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한다. 지금부터 지자체와 지역 건설업체가 머리를 맞대고 도로공사로 인한 낙수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